

#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서비스 기능 개선과 신뢰 강화



정 경 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정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가운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경증 질환은 소위 빅5 병원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으니, 의료 현장의 개선 움직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이번 단기 대책은 단순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하고('19.9월부터 적용),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 질환(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적용되는 100대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중별 가산율과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

다. 대신, 다학제통합진료료 등 중증·심층 진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고도의 중증·심층 진료 위주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중증·심층진료를 달성하는 기관에는 별도 수가 체계를 적용하며,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나간다.

둘째, 환자의 질환과 상태에 맞는 적정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제도를 개선한다. 현행의 진료 의뢰제도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환자 요구에 의한 형식적 의뢰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한 진료의뢰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를 하는 경우에 한해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의 상세 소견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의뢰할 뿐 아니라 직접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환자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진료 의뢰 시 영상정보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도록 한다. 의원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원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의원 간 의뢰제도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셋째, 경증환자나 중증 치료 후 안정기에 있는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여 협력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회송제도를 강화한다. 단순 퇴원과 같은 형식적 회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회송 이후에도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다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예약·진료할 수 있도록 신속예약제 운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회송 운영 실적을 의료 질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회송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넷째, 국민들이 적정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건강보험 급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장범

위 조정을 검토하고,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바람직한 의료 이용·공급체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공·사보험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증으로 확인된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연계하여 환자 본인부담률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여 의료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안내문을 발생하고, 적정 이용에 대해 컨설팅 하는 체계도 마련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의료 해결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병의원에 대한 신뢰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병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되면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 지역우수병원에는 지역 가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또한 전문병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관리를 위해 교육상담을 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대책들은 2020년 상반기 중 시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기 대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재정립, 협력의료체계 강화, 국민·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계, 전문가, 환자·소비자, 노동계 등과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0년,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